

국민편의 중심의 수사구조 개혁으로

大韓警協의 「경찰수사권독립 시기상조」 주장은 時代 逆行하는 기득권 論理

허준영 경찰청장이 최근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인권침해 우려」 등을 담은 흥보책자를 배포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과율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검찰이 과율을 한다고 우리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기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깊은 뜻이 있는 믿을 일단 처분을 기다린 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허 청장의 발언은 지난달 초 『검·경은 수사권 얘기를 하지 말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이후 두 달 만의 언급으로, 당시 허 청장은 「경찰에겐 목마권 밖에 없다며 침묵선언을 했다.

이와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는 공식 틀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중지하라』고 언급하는 한편 『부처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천정배 법무장관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에게 공개논평을 중단토록 지시 했었다.

특히,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허 청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수사권 조정이란 용어 자체가 검찰과 경찰이 떡떨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 구조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 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기득권에 대한 집착, 시대에 역행하는 논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얼마 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냈다.

그는 「변호사 단체가 편파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검찰과 '동업자'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견해를 밝힐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혁명한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허 청장은 전방위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선 『대

가성도 없고 액수도 적지만 지휘관이 관련된 만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해선 『현직 검사의 조사문제에 대해 곧 검

찰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사 소환문제처럼 애매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구조의 개혁이 필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을지훈련을 갖고 유사시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훈련장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警友會, 地域社會 奉仕활동 적극 추진키로

경우회가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우회는 그 1단계로 금년 하반기중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단위의 지역경우회별 봉사대를 조직해 실효성 있고, 추진 가능한 봉사분야를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우회 중앙회 관계자는 『경우회가 국가

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는 봉사단체의 이미지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경우회 중앙회는 매년 각급회의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하여,優秀한 급회에 대해서는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함과 이어울 조직의 위상제고와 신뢰증진에 현

하반기부터 대도시 단위별 奉仕隊 운영

와 경찰을 사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단체가 되기 위해 그간 각급회별로 다소 소홀했던 봉사활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우회는 경찰을 사랑하는 치안협력단체로서의 명분에 부합되는 방법·교통 및 거리 질서유지, 청소년 선도, 미아·가출인 찾기 등의 경찰업무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자연보호 캠페인, 쓰레기 줍기, 대형 행사장 봉사활동, 불우이웃 돕기, 수용시설 방문 봉사 등 지

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봉사활동 소요 예산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구홍일 경우회장은 지난해 10월 취임사를 통해 『넓은 시절,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 경우회원들이 협직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제2의 봉사활동을 자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치안행정의 버팀목으로서 당당하고 활기찬 경우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의 조직 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와 관련해서도 현행 「제왕적 검사지배형」 수사권 구조 하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즉, 형사사법시스템상 검찰에 걸려진 과부하와 검찰의 수사업무에 지나친 집착으로 무죄 판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기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공판업무에 대한 검찰의 마이너스 성과는 검찰의 수사업무에

국민은 견제와 균형을 선호

- 수사구조 개혁으로 삶의 질 향상을 -

한국에서 범죄 수사권에 관한 경찰과 검찰의 대립은 건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 발전을 위하여 결단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쉽게 정지논리에 표류되거나 양비론(兩非論)에 빠져나온다. 사실상 이러한 왜곡된 현실은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케 하는 것이며, 실제로 인권의식이 강한 경찰관일수록 협행수사권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거나 국민의 입장에 입각한 평가기준과 이에 근거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필자에 의하여 수행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공식통계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흐름을 보완하고 수사권 구조 개혁의 결단을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우선 모형적(Typological)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수사권 구조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검사 권한 독점적인 「제왕적 검사지배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제왕적 검사지배형」 수사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를 직접 경험했던 시민들은 약과반수가 검찰 조직 자체를 상당히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며 위압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검찰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5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응답 시민의 약 4분의 1만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검찰의 인권보장의 수준에 대해서도 불과 응답자의 약 4분의 1만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결과적으로 검찰 스스로 주장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찰·검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정상적 모습을 갖게 되었던 한국의 수사권 구조는 이제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제왕적 검사지배형」 구조에서 시급히 탈피하여 본래의 정상적 형태로 되돌려 놓아져야 할 때이며, 그 작은 첫 결단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의 수사 현실에 맞는 개정에 있다 할 것이다.



이웅혁
(경찰대학 교수)

상적 상황에 대해서는 더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범죄수사의 목적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제기 및 유지 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일상 업무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 범죄예방, 시민보호, 사회문제 해결, 피해자구제, 범죄의 감소 등을 더 중요 한 목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현재 외국에서 효과적인 경찰활동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의 개념과도 상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아닌 통합적 경찰활동을 전제로 다면적 수사 서비스를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형소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형소법 개정을 위한 이인기 의원 입법 공청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지난 60여년간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검·경 수사권 공유형태의 경찰 독자 수사권 보장 입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120여 만 경우회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후배경찰관에게는 용기와 심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 9월 15일(목) 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 주최 : 국회의원 이인기
3. 토론자
○ 발제자 :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 진행자 : 이영조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4. 행사일정
○ 개회식 14:00~14:40 ('40)
○ 종합토론 14:40~16:20('100)

大韓民國在鄉警友會

형법 형사소송법

- * 약력
• 법학박사,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전공
•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교수
•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 중앙경찰학교(신임순경)외래교수
• 경찰종합학교(현직경찰)외래교수
•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 외래교수
• 해양경찰(현직경찰) 외래교수
• 청와대 경호실(101단) 외래교수
• 서지방경찰청 청원경찰 교육 외래교수
• 현직경찰 승진특강(23년)

한영삼 교수의 지캐스트 경찰승진특강

23年 강의 노하우로
승진문제 일망타진!!